

위기에서 기회로:
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
새로운 성장 패러다임

홍석철

서울대 경제학부

2025년 10월 29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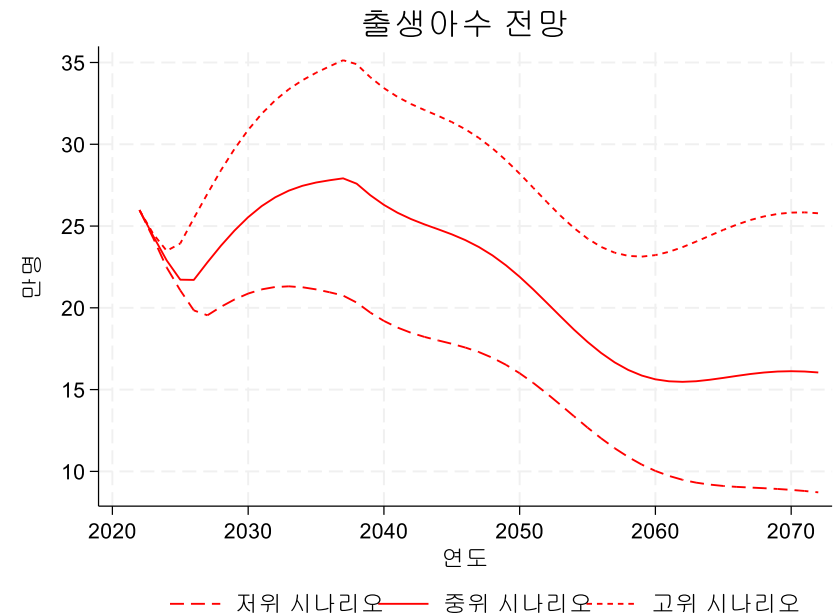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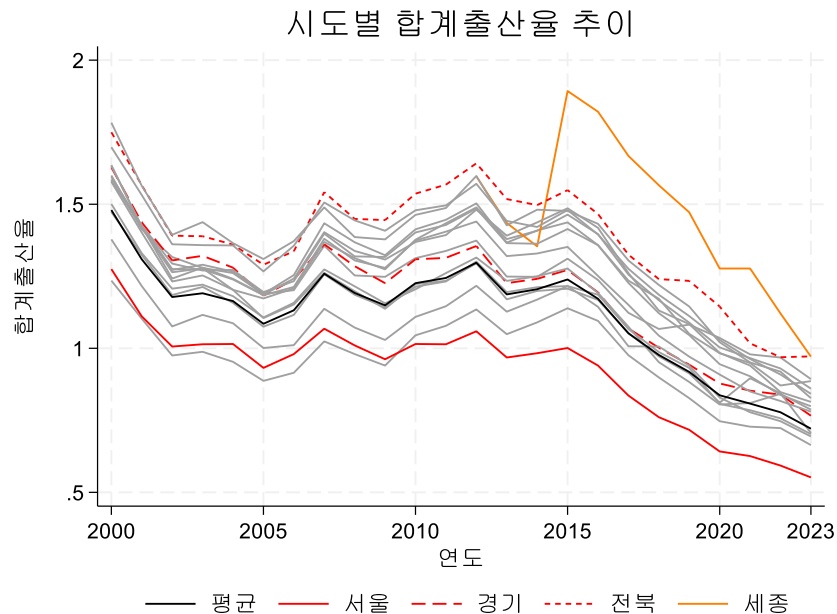
한국국제경제학회

2025년 추계정책세미나

장기간 지속된 초저출생 위기

- 초저출생 추이 -

- 합계출산율은 '12년 1.30명에서 '23년 0.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추락
 - 대부분 지역에서 '15년 이후 반등없이 하락 지속
- 최근 10년 사이 출생아수는 절반으로 급감
 - 2013년 44만명 → 2023년 23만명
 - 현재의 출산율(0.7명대) 추이 지속하면,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출생아 수는 23만명 → 10만명(2060년대) → 4만명(21세기 말)으로 급감 우려



장기간 지속된 저출생 위기

- 출산율 반등 조짐 -

- 하지만 예상을 깨고, '24년 합계출산율은 0.75명(3.7%↑)으로 반등
 - 출생아수, '23년 대비 8,300명 증가(3.6%↑)
 - 혼인건수, '23년 대비 28,870건 증가(14.8%↑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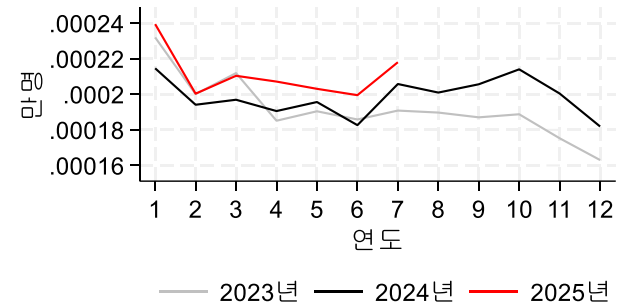
- 저출생 추이 반등의 배경

- 일부에서는 코로나 종식에 따른 결혼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나, '23년 혼인건수는 전년 대비 1% 증가에 그쳐
- 좀더 직접적인 원인은 정책 효과라고 판단
 - 6+6 육아휴직제도, 신생아특례대출 등
- 특히 '24년 저고위와 통계청의 인식조사 결과, 결혼과 출산 의향이 개선된 것은 고무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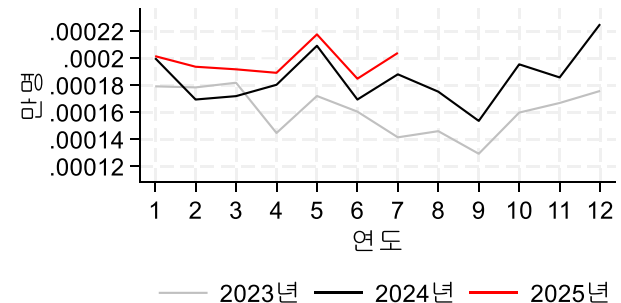
- 올해 출산율은?

- 출생 선행지표(예: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신청건수)를 분석해보면, 올해 출산율은 0.8명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
 - '25년 상반기 출생아수 7% 증가, 44년 만에 최대

월별 출생아수 추이



월별 혼인건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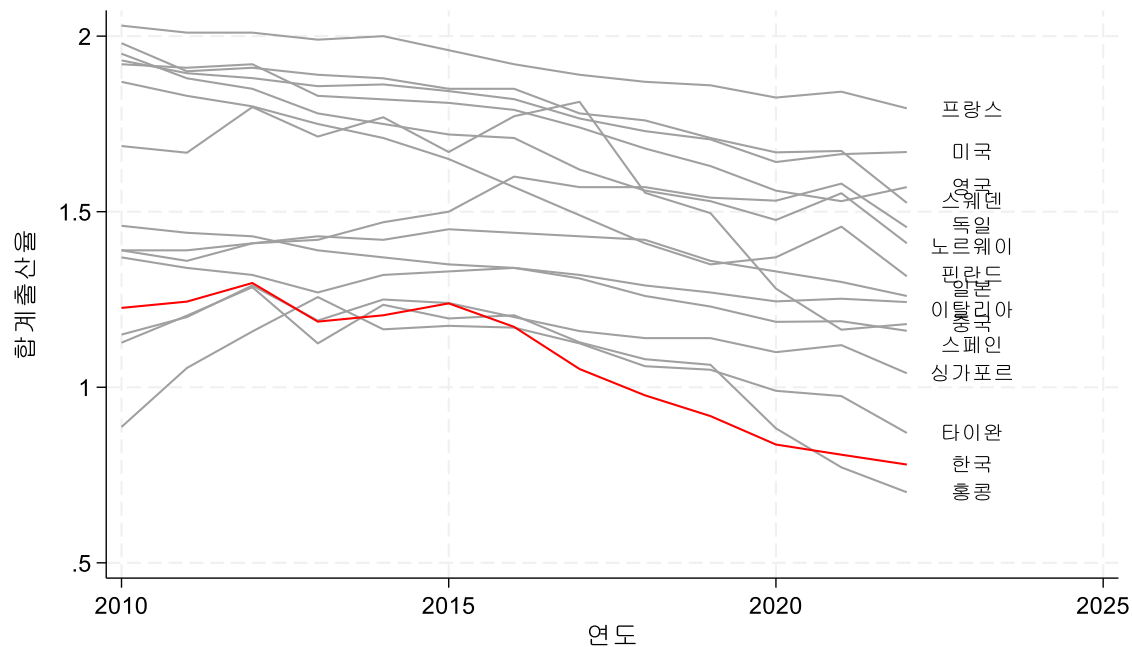


자료 출처: 통계청 인구동향조사

장기간 지속된 초저출생 위기

-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출산율 -

- 주요 선진국 수준까지 회복하려면 더 과감한 대응 필요
 - 정부의 출산율 목표: 2030년까지 1.0명 ('24년 6월 발표)
 - '22년 기준,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 1.51명의 1/2 수준에 불과
 - OECD 회원국 중 한국 다음으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스페인의 2/3 수준
- 하지만 2010년 이후 전세계적인 출산율 하락 추이도 주목할 필요
 - 비용 완화 목적의 전통적인 가족 정책의 한계 시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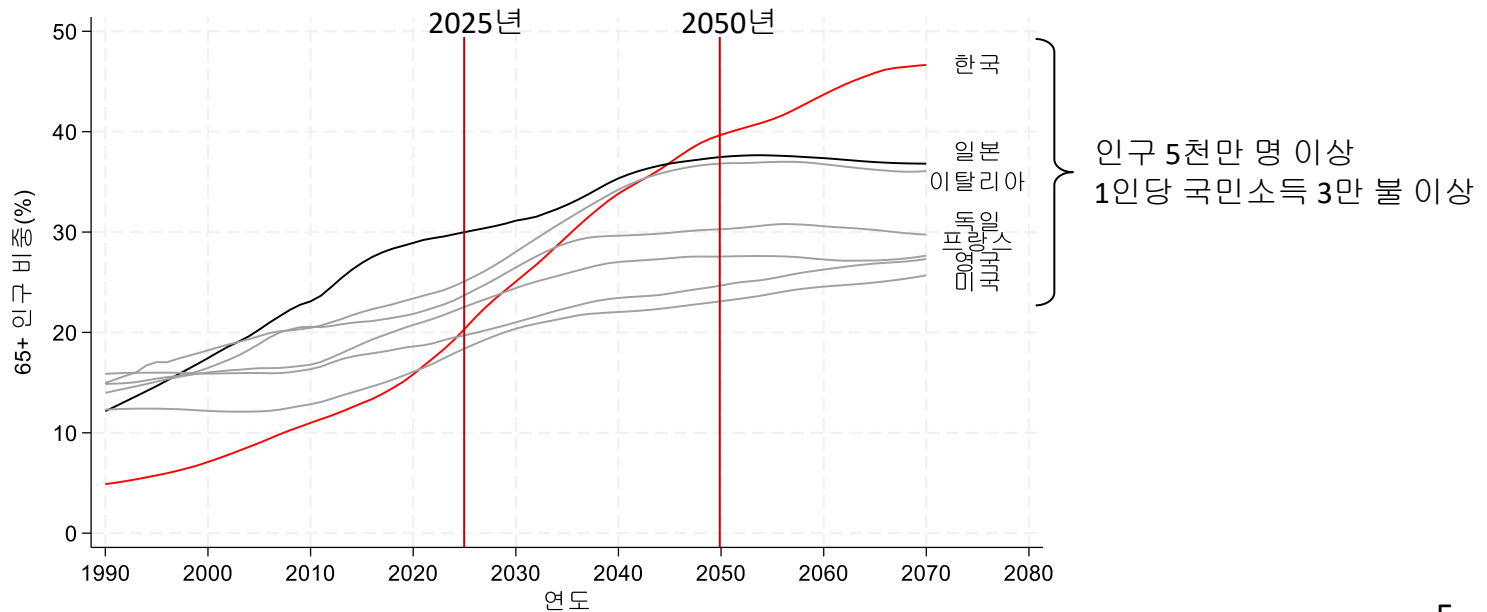


자료 출처: OECD와 World Bank 자료

급격한 인구고령화

- 유례없는 인구고령화 속도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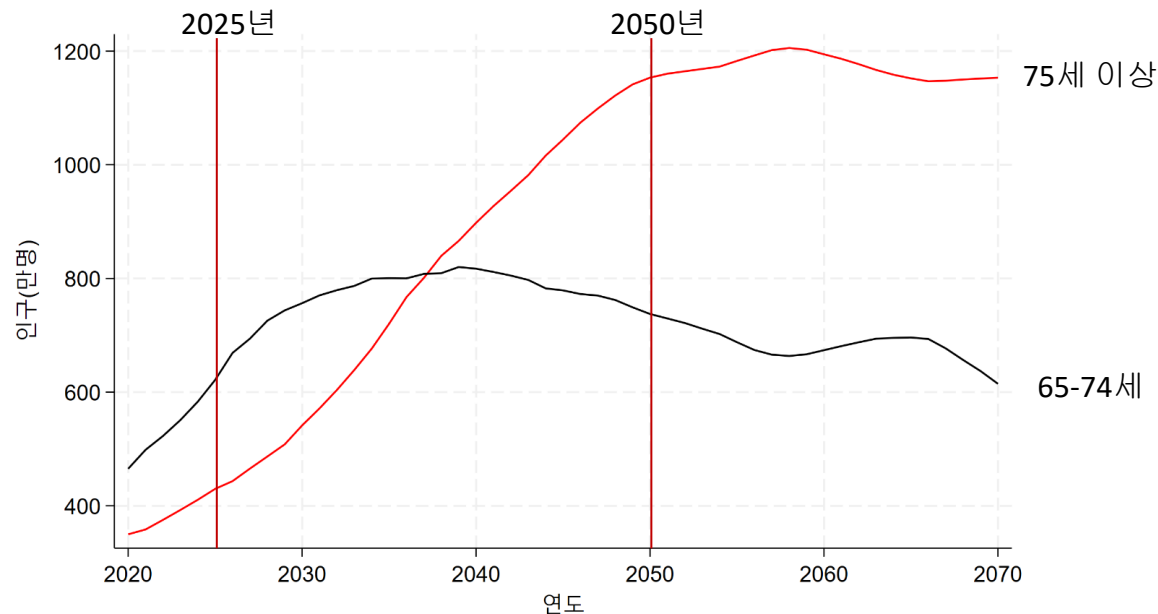
-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 고령(65+) 인구 비중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
 - '25년 고령인구 1000만 명 & 고령인구 비중 20% 돌파
 - '35년, 고령 인구 비중 30%에 도달 예상
 - 일본보다 2배 빠른 속도: 20%에서 30% 도달 소요 연수 - 한국 12년, 일본 21년
 - '45년 일본을 추월하고, '51년 세계 최초로 40% 돌파, '70년 47%까지 상승 전망
 - 반면 2050년대 이후 일본·이탈리아는 30% 중반, 독일·프랑스·영국·미국은 20% 중후반에서 정체 전망



급격한 인구고령화

- 급증하는 75세 이상 인구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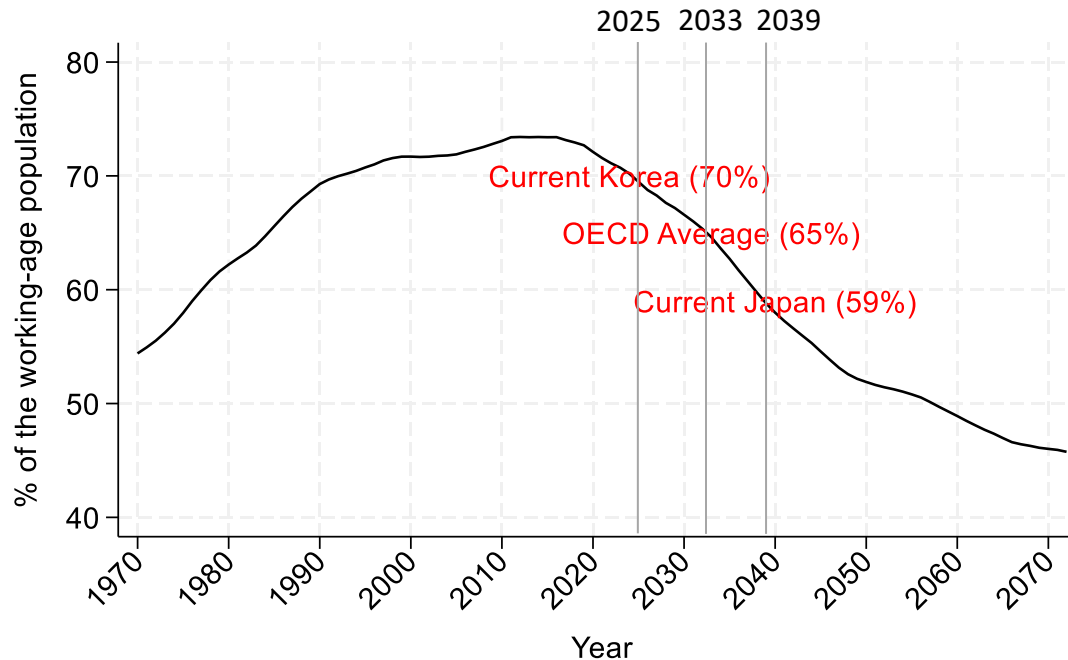
- 특히 베이비붐 세대(1955-74년생)가 고령화되면서 2050년까지 75세 이상 인구 규모가 현재대비 3배 가까이 증가 전망 (매년 20-40만 명씩 증가)
 - 75세 이상 인구 추정치: '25년 430만 명(8.3%) → '50년 1153만 명(24.5%)
 - 65-74세 이상 인구 추정치: '25년 622만 명에서 2039년 820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 전망



자료 출처: 통계청 장래인구추계

생산연령인구 감소

-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해온 생산연령인구(15-64세) 비중('24년 70.2%)은 '16년 이후 빠르게 감소
 - '33년 이후 OECD 평균인 65% 보다 낮아지고 → '39년 이후에는 일본(59%) 보다 낮아지며 → '70년에는 46% 전망
 - 향후 10년 내 25~59세(적극생산연령) 인구는 320만명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483만명 증가 예상
 - 현재 부산광역시 인구 328만명에 육박하는 규모의 생산 인구 감소



인구위기에서 촉발된 경제·사회위기

- 인력·인재 부족과 저성장 전망 -

- 생산인구의 감소 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의 인력 및 인재 부족 문제가 빠르게 심화될 것으로 전망
 - 생산연령인구: '25년 3590만명 → '35년: 3188만명 → '45년 2665만명 (향후 20년 동안 현재 서울 인구 만큼 생산인구 감소)
 - 분야별 인력 부족 전망:
 - 고용노동부: '27년까지 AI, 빅데이터, 클라우드, 나노 등 4대 신기술 인력 6만명 부족 전망
 - 산업부: '30년까지 미래자동차 3.5만명, 이차전지 2.5만명, 반도체 1.5만명, 디스플레이 0.2만명 부족 전망
 - 인재 확보를 위한 글로벌 각축 속에, 국내 인재의 해외 유출 증가
- 생산인구감소에 따라 급격한 성장률 저하 전망
 - 한국경제연구원(2023),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
 - 생산가능인구 1% 감소 → GDP 약 0.59% 감소
 - 생산인구 추이 전망 下, 2050년 GDP는 2022년 대비 약 28.38% 감소 추정
 - 국회예산정책처(2023),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: 인구위기 대응전략
 - 합계출산율 0.7명 지속하면, 2040년부터 0%대 성장

인구위기에서 촉발된 경제·사회위기

- 인력·인재 부족과 저성장 전망 -

- KDI (2025.5),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
 - 인구구조변화의 영향
 - 생산연령인구감소 → 노동투입감소
 - 인구고령화 관련 지출증가 → 생산위한 자본투입 감소
 - 인재 부족 → 생산성 증가 정체
 - 저출생·고령화의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해 잠재성장률은 2025-30년 1.5%, 2031-40년 0.7%, 2041-50년 0.1%로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
 - 2040년대 초반부터는 '역성장(degrowth)'이 일상화되는 국면에 진입
 - 1인당 GDP 증가율도 2040년대 중반까지는 지속 감소 예상

시나리오별 잠재성장률과 1인당 GDP 증가율 전망

(%)

	잠재성장률			1인당 GDP 증가율		
	비관	기준	낙관	비관	기준	낙관
2025~30년	1.2	1.5	1.7	1.4	1.6	1.8
2031~40년	0.4	0.7	1.1	0.6	1.0	1.4
2041~50년	-0.3	0.1	0.5	0.3	0.7	1.1

인구위기에서 촉발된 경제·사회위기

- 돌봄의 지속가능성 -

■ 돌봄 자원 마련의 지속가능성 문제

- 75세 이상 인구 급증 → 의료·요양 수요와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위기 우려 상승
 - 국회예산정책처(2023): 건강보험은 2028년,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31년에 누적준비금 소진 전망
- 양 보험은 부과방식(pay-as-you-go) 체계이기 때문에 지출이 증가하면 그에 맞춰 보험료를 높이거나 재정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
- 하지만 보험료 상승의 부담이 생산인구에게 전가되면서 자원 마련의 지속가능성 문제 심화 중

[그림 13] 건강보험 수입, 지출 및 준비금 전망: 2023~2032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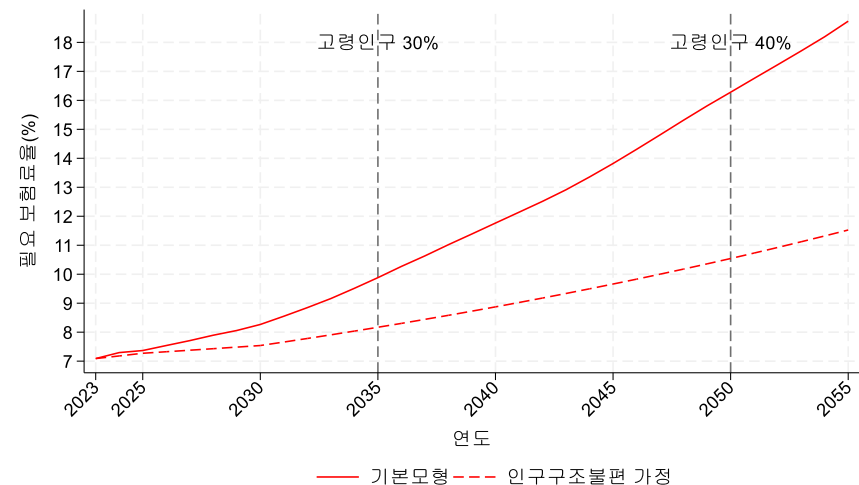


주: 1. 준비금은 결산상 잉여금을 뜻하며, 음수로 표기된 준비금은 준비금 소진 후 발생한 누적 적자액을 뜻함

2. 2023, 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기결정된 7.09%, 2025~2032년은 매년 2.06%(최근 3년 평균)씩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되, 2030년부터 8% 상한 유지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인구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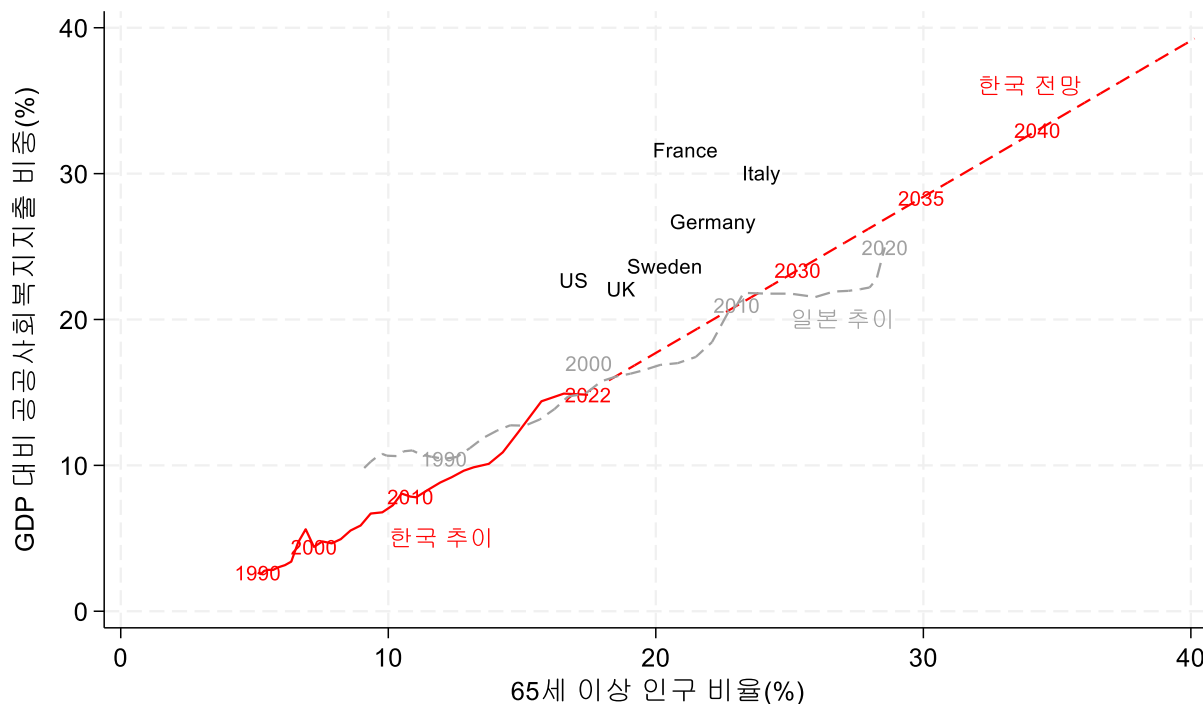


출처: 홍석철(2025), 재정네트워크 발표자료

인구위기에서 촉발된 경제·사회위기

- 재정 지속가능성 위기 -

-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국가 재정 전반의 지속가능성 위기 초래 (홍석철 2024, 사회복지지출 전망과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, 재정포럼)
 - 의무지출 및 사회보험지출 증가로 인해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'22년 14.8%에서 '35년 28.3%로 증가 전망 (현재 고부담·고복지 주요 국가 평균은 28% 수준)
 - 국민부담률(조세+사회보장기여금)도 '23년 31.4%에서 '35년 47.1% 증가 전망 (현재 가장 높은 프랑스 46.1%를 상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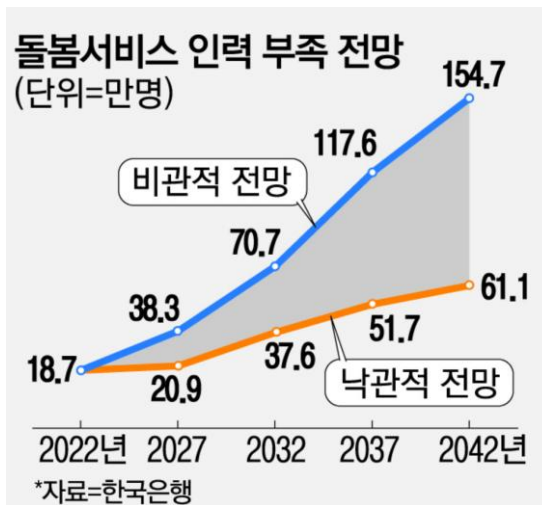


인구위기에서 촉발된 경제·사회위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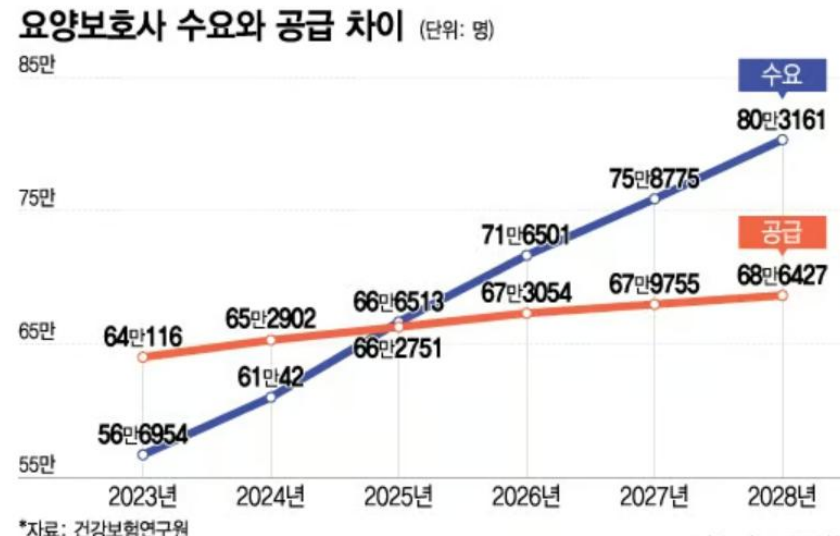
- 돌봄 수급 불균형 심화 -

■ 돌봄의 수급 불균형 심화

- 인구고령화에 비례적으로 돌봄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 인력 공급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
 - 한국은행(2024) 돌봄서비스 노동공급 부족 추계: '22년 19만명 → '32년 38만-71만명 → '42년 61-155만명
 - 건강보험연구원(2024): '28년 요양보호사 약 11.7만명 부족 전망
-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돌봄 수요 다양화
 - 경제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 & 독거 노인 ↑ 등 노인 가구의 특성 변화 → 의료·요양 등 전통적 돌봄서비스와 더불어 간병·주거·생활지원(이동, 식사, 여가 등)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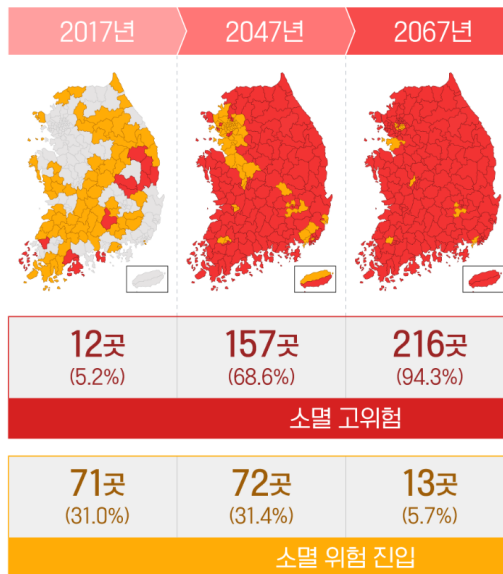
그래픽 출처: 매일경제(24.3.5.)



인구위기에서 촉발된 경제·사회위기

- 국가 기반의 지속가능성 위기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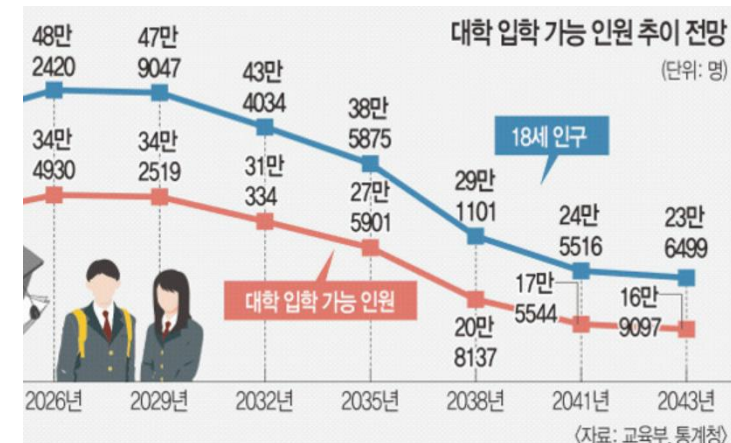
- 2047년에는 전국의 모든 지역이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하고, 68.6%는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(감사원, 2021)
- 뿐만 아니라 장기간 초저출생 문제가 지속하면서 군병력 및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국가 주요 기반의 지속가능성 위기도 심화
 - 특히 2015년 이후 출생아수 급락의 영향이 2030년대 초반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



그래픽 출처: KBS(2021.8.13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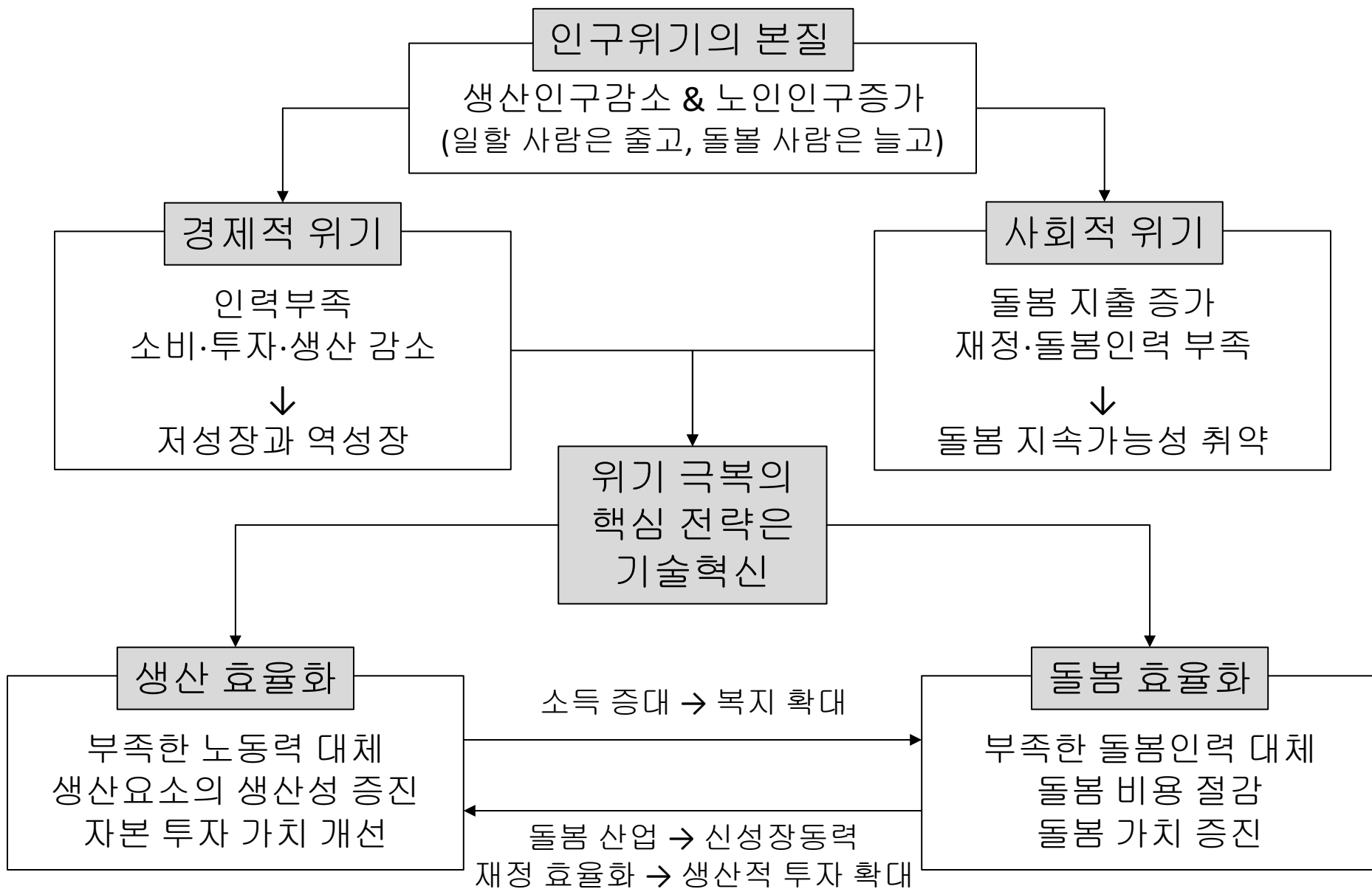
그래픽 출처: 동아일보(2023.12.11)



그래픽 출처: 국민일보(2023.2.15)

인구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전략

- 기술혁신에 기반한 생산·돌봄의 효율화 -



1. 인적자본·생산성 중심의 스마트 성장

- 기술혁신이 핵심 -

- 인류 역사에서 기술혁신 수요는 대부분 생산 투입 요소의 부족에서 비롯 (Rober Allen 2009) → 기술혁신은 인구구조변화로 인해 직면할 저성장과 사회 지속가능성 위기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해법이 될 것
-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 경로
 - 생산인구 감소 → 기술로 노동력 대체
 - 인력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간 수급 불균형 문제는 심화할 것
 -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은 기계·AI·로봇 등의 자동화 기술을 통해 노동 부족 해소
 - 기술진보의 본질은 생산 요소(특히 노동)의 생산성 증진
 - 기술혁신은 총요소생산성(TFP) 증진을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핵심 경로
 - 기술혁신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인다면 인력 부족 문제 보완
 - 기술혁신을 통해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 혁신 가능
 - 건강·돌봄·연금 등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돌봄과 복지 분야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 혁신이 필요 (예: 디지털 헬스케어, 스마트 돌봄 등)
- 규제 개혁은 기술혁신의 전제 조건
 - 인구위기 시대에 필요한 기술은 빅데이터 활용과 결합, 산업간 융합 등 새로운 방식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→ 구시대적 규제는 끝내야

1. 인적자본·생산성 중심의 스마트 성장

- 노동력과 인재 확보는 필수 -

- 노동은 여전히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의 핵심 요소가 될 것
 - AI, 자동화, 로봇기술이 발전하더라도, 창의성, 감정노동, 사회적 상호작용, 복잡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인간의 노동은 여전히 중요
(Acemoglu and Restrepo (2019), “Automation and New Tasks”, J Econ Perspectives.)
 - 기술 혁신과 관리에서 숙련된 노동력은 필수
 - 노동은 소득 분배와 내수 시장의 핵심
-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확보와 함께 기술·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인적자본 정책 혁신 필요
 - 노동력 확보는 핵심적인 인구 정책이 되어야
 - 일·가정양립 강화, 노동시장 성평등 격차 해소 → 여성 경제활동 확대
 - 계속고용, 고령친화적 직무·노동환경 구축 → 고령층 일자리 확대
 - 외국인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비자정책에서 이민정책으로 전환 필요
 - 이민정책 추진 시 국내 노동 시장에 미칠 파급 영향 고려 중요
 -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외국인 인재 확보 어려울 것
 - 인적자본 정책 혁신 방향
 - 국가 차원의 인재 육성 로드맵 수립 → 미래 전략 산업 중심 인재 양성 필요
 - 저출생·초고령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인재 양성도 중요 →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높은 돌봄 수요에 맞춰 합리적 처우 개선 등 필요

2. 인구·지역 다양성 기반의 포용적 균형 성장 - 다양성의 중요성 -

- 다양성은 생산성과 혁신의 원천
 - 다양성은 지식의 보완성(knowledge complementarity)과 아이디어 충돌(idea collision)을 통해 혁신을 유도
 - Romer(1990), Aghion and Howitt(1998): 다양한 기술·지식 집단이 많을수록 혁신의 확률 분포 확대
 - 다양성은 노동공급·수요의 혁신적인 재조합을 유도
 - 전통적 정규직·남성·중년 중심 고용 구조 → 여성·고령자·외국인·비정형근로자 포용 전환 → 인력 부족 완화, 조직 생산성 향상 (OECD 2021, *Uncovering the Role of Skills and Diversity for Firm Productivity*)
 - 가구유형의 다양화 → 새로운 시장 창출 → 서비스산업 중심의 내수성장형 구조 전환 (Lee and Yang 2022, “The Impact of Single Households on Local Economy: Evidence from Korea’s Demographic Trends”)
 -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 클러스터 → 국가 전체의 위험 분산 효과
 - 과도한 수도권 쏠림의 부작용: 한계생산체감, 부동산·노동비용 상승
 - 다양성은 제도적 혁신의 촉진제
 - 다양한 생애·가구·직업 형태 포용 → 규제 혁신, 제도의 유연성 확대
 - 사회적 다양성은 신뢰·포용을 강화 → 거래비용 절감, 사회적 효율성 증진 등 사회자본(social capital)을 확장
 - Goodman (2025), “Institutional Diversity and Innovative Recombination”: 다양한 제도적 규칙·조직 유형이 공존할 때, 하나의 규제 체계에만 의존할 때보다 새로운 제도적 혁신 발생

2. 인구·지역 다양성 기반의 포용적 균형 성장

- 지역 균형 발전 -

- 지역 간의 격차와 불균형은 국가 성장에 부정적 영향
 - Floerkemeier (2021), “Regional Disparities, Growth, and Inclusiveness”, IMF.
 - 지역 불균형은 단순한 형평성 문제를 넘어 경제 비효율성(market failures, 자원 분배 왜곡, 이동 제약 등)을 유발
 - 균형 발전 정책에서 단순히 후발 지역에 자원을 투입하는 방식보다는 공간 연계성, 지역 특화 역량 강화,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가 중요
-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응 전략
 - 국토연구원 2022, 청년 이동 이유 조사 결과: 일자리 57.9%, 주거환경 22.9%
 -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은 일자리 →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활성화 유인 필요
 - 하지만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만으로는 균형 발전을 이루기에는 역부족
 - 주거, 문화, 편의시설, 교통, 보육과 교육, 의료 기반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야
 -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 조건
 - 청년 지방 이동·정주 지원
 - 이주비, 주거비, 정보 부족, 그리고 네트워크 부족 등 다양한 직·간접 비용 지원
 - 지역 거점 도시 육성
 - 초저출산 추이 지속으로 청년 노동공급이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형평성만을 고려한 국가 균형 발전은 지속 불가능

3. 돌봄 자본주의 기반의 혁신 성장

- 누가 돌볼 것인가 -

- ‘누가 돌볼 것인가’는 초저출생·초고령 사회의 최대 화두가 될 것
 - 돌봄 문제는 본질적으로 ‘돌봄 시간’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
 - 아이 돌봄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은 저출생 해법의 핵심 → 주요 정책: 일·가정양립, 사회적 돌봄 강화, 돌봄비용 부담 완화
 - 노인 돌봄 → 수급 불균형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
 - 가능한 방식은 가족이 돌보거나, 시장에서 돌봄서비스를 구매하거나, 국가가 돌봄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것
- 사회적 돌봄의 역할과 한계
 - 복지국가의 틀을 갖추기 전에는 돌봄은 가족의 몫이었지만,
 - 사회보장체계를 갖추고 가족의 경제활동 참여 필요가 높아지면서 사회적 돌봄(즉 국가와 시장의 역할)이 중요
 - 하지만 자녀 양육과 노인 돌봄을 사회적 돌봄으로 완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족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
- 돌봄 자본주의?
 - 결국 인구구조변화의 시대에 당면한 도전은
“우리 사회의 가용한 자원(시간, 인력)과 자원(재정)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사회가 필요한 돌봄을 생산하고 분배하느냐의 문제”로 귀결

3. 돌봄 자본주의 기반의 혁신 성장

- 일하는 문화 개선과 EFG 경영 -

- 돌봄 자본주의 시대에 노동과 돌봄 시간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일하는 문화 개선 필요
 - Claudia Goldin (2021) — “The next revolution in labor markets will come from rethinking how we allocate time between paid and unpaid care.”
- 여성 경제활동과 출산·양육 간의 대체성 완화를 위한 일하는 문화 개선
 - 육아휴직제도와 같은 기존의 일·가정양립 정책 확대를 넘어, 근로시간단축, 시차근무제,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로 환경 조성 추진 필요
 - 시간제 정규직 제도 활성화 등 유연한 고용 환경 필요
 - '22년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: 희망정책 1위 “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(38%)”
 - 시간제 정규직 일자리 비중: 네덜란드 46%, 독일 27%, 스웨덴 24%
- 계속고용을 통한 고령 일자리 확대
 - 고령자의 계속고용은 노후를 위한 소득 증대와 건강 증진을 도모
→ 노인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인력 부족 해소에도 기여
- 기업의 일하는 문화 개선은 EFG 경영의 핵심
 - ESG(Environment Social Governance) 경영에서 사회적 책임(Social)의 핵심은 일하는 문화 개선에 기반한 가족(Family) 친화적 경영 → EFG

3. 돌봄 자본주의 기반의 혁신 성장

- 돌봄 가치와 돌봄 산업 -

- 돌봄 자본주의 기반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돌봄의 가치 개선이 전제되어야
- 돌봄 산업의 경제적 가치 제고 없이는 돌봄-성장 선순환은 불가능
 -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실버산업
 - 재택의료·원격의료 서비스, 로봇 돌봄 서비스, 고령 친화적인 스마트 주거 서비스,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금융·자산 관리 서비스 등
 - 돌봄 산업의 경제적 가치
 - 점차 증가하는 돌봄 시간의 기회비용 절감 → 돌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낮은 인식은 돌봄 기술 투자가 미흡한 이유
 - 전 세계적 초고령화 추이 → 기술 수출 등으로 산업적 가치와 고용 창출 기대
 - 중국: 24년 말 65세 이상 인구수 약 2억 2천만 명(총인구의 15.6%), 실버경제 규모는 중국 GDP의 6% 수준
- 돌봄의 가치 개선은 돌봄 수급 불균형 해소의 전제 조건
 - 높은 수요와 제한적인 공급에도 불구하고 돌봄 가치 상승이 억제되는 이유
 - 높은 공공성 요구에 따른 돌봄 가격 규제의 결과
 - (1)소비자에게 바우처 지급 → 수요 급증, (2)인건비 억제 → 공급 제한
 - 돌봄 정책을 복지적 차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, 경제적 관점에서 설계 필요

4. 지속가능한 재정·사회보험 구조개혁

- 재정위기와 성장률 -

- 재정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위기는 1)민간 투자 위축, 2)조세부담 증가 → 기업가계 활동 억제, 3)국가 신뢰도 하락 → 리스크 프리미엄 및 자본비용 상승, 4)복지지출 비효율 확대, 5)인적자본·산업구조 왜곡 등을 통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
- 국가채무와 성장률의 관계
 - Reinhart and Rogoff (2010), “Growth in a Time of Debt”
 - 44개국 200년 패널 분석
 -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90%를 초과하면 평균 성장률 약 1%p 감소
 - Carrington et al. (2024), “How Much Debt is Too Much?”
 - 성장률에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부채비율 기준점을 52%로 분석
 - Salmon (2021), “The Impact of Public Debt on Economic Growth”
 - 아시아 14개국 분석, 부채비율이 낮거나 중간 수준일 때도 부채비율 1%p 증가 → 성장률 0.012~0.125%p 감소 영향
- 전세계 주요국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
 - 프랑스(24년 부채비율 134%): 연금개혁, 사회보험 재정 부담 증가와 세수 기반 약화의 이중 압력, 경제성장 둔화 → 대규모 시위와 정치·사회 갈등 심화

4. 지속가능한 재정·사회보험 구조개혁

- 핵심은 지출효율화 -

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의 핵심은 지출효율화

- 사회보험 수입 확대 방안의 한계

- 보험료 인상 → 적극적인 지출 절감 노력 없이는 생산인구 설득 쉽지 않을 것
- 국고지원 확대 → 미래세대 부담 전가는 마찬가지 & 진료비 절감 유인 감소
- 소득·고용 증대를 통한 수입 확대 → 외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방안이지만,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막대한 보험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

- 지출효율화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

-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·요양 지출 증가를 피할 수는 없을 것 → 지출을 지금보다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출 증가를 완화하는 것이 '지출효율화'의 지향점

■ 지출효율화 유형

- 과도한·불필요한 의료·요양 이용을 방지 & 적정 수준의 이용을 유도

-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 제도 개선: 행위별 수가 제도 → 가치기반 보상체제로 전환
- (가성비가 낮은) 저가치(low-value)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조정

- 비용 절감 서비스 방식 활성화

-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
- 생애말 의료비 관리: 연명치료 → 완화의료 및 호스피스 확대

- 생산의 한계비용을 낮춰 지출 절감

- 기술 진보, 규모의 경제, 공급 확대

5. 국가 거버넌스 혁신

- 인구위기는 현행 국가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는 “경고등”
 - 급격한 인구구조변화에 맞게 사회경제체계를 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 사회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
- 부처간 칸막이와 정치적 걸림돌을 없애고, 인구, 경제, 재정, 복지, 노동, 과학기술 등의 통합적인 기획·조정 역량 강화 필요
 - 미래 전환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공론화와 실천적 과제 추진을 위한 동력 갖춰야
 - 독일 Every Age Counts / Demografie-Strategie: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가 의료, 교육, 돌봄, 재정, 지역균형, 노동시장 등 제도적 대응을 통합 설계
 - 정치-정책-제도의 사회적 신뢰 구축과 협치 절실
(Knack and Keefer (1997), “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?”, *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*)
 - 단기성과와 현안 중심의 국회와 정치 구조의 한계 바뀌어야
(Alesina and Tabellini (2007), “Bureaucrats or Politicians? Part I: A Single Policy Task”, *Journal of Public Economics*)
 - 지방 정부의 역할 강화 및 차별화
 - 독일: 인구정책을 복지가 아닌 지역경제 전략으로 통합